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이갑숙*, 안정선**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Constructing Governance to Implement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Kab-Sook Lee*, Jung-Sun An**

Gender Equality Policy Research Station, Korea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e*
Dept. of College nursing &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우리나라는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도입했다.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다양한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실행을 위해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형과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성주류화, 젠더거버넌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여성정책

Abstract The Korea Government adopted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rganizations and groups of the society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ystematic and continuous working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 We suggest a model for constructing gender governance with the women, the neglected classes, the educational group, the occupational group, the research group, NGOs, the medias, the government, the council, and the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center, etc.

Key Words : Gender Mainstreaming, Gender Governance,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Equality, Women's Policy

1. 서론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4차례의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의 추구하고 성 주류화는 전 지구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 여성대회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 평등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제로 성주류화를 채택·선언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엔은 성주류화를

Received 15 March 2013, Revised 10 April 2013

Accepted 20 May 2013

Corresponding Author: Kab-Sook Lee(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e Gender Equality Policy Institute)

Email: Kabsook@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구조와 참여자들이 형성하는 관계 구조속에서 산출되고 이 때 형성된 산출이 반복되어 제도화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은 2000년 이후 여성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정책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성주류화의 실효성은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맥락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성주류화는 정부와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성주류화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다양한 조직과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즉, 성주류화 실행의 주요 주체로서의 여성, 주민, 정부, 의결기관, 전문가집단, 여성/사회단체, 언론, 압력단체, 지원기관 등 다양한 민간 조직과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2.1 성주류화:성별영향분석평가

성주류화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성주류화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주류 발전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성주류화 실행의 방법으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 공무원의 성인지력 교육 등 있으나, 핵심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 하기위한 법적장치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 9개 기관의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분석을 시작으로 2005년 85과제, 2006년 187과제, 2007년 720과제, 2008년 1,531과제, 2009년 1,908과제, 2010년 2,401과제, 2011년에는 2,957개 과제를 수행하여 7년간 총 9,916과제를 수행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수 못지않게 증가한 것은 참여 기관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급증하였다. 2005년 중앙정부가 37개의 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만 참여한데 이어서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였으며, 2007년 시도의 교육청까지 참여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수는 2004년 30개 기관 2011년에서 2011년 27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0%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평가 과제수의 급속한 증가, 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자체평가 증가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과 공직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1]. 반면 부적절한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 부재, 정책환류 개선 효과 미비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도 제기되었다 [2][3].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분석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평가 결과가 환류 되어 정책개선의 효과는 미흡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범위 및 단위, 대상과제 선정기준, 대상과제 수행 절차, 평가결과활용, 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특히 성평등 실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참여에 의한 젠더-거버넌스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무원, 전문가, NGO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극소수의 전문가만 참여하고 있는 정부중심의 독립형 거버넌스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4].

2.2 젠더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 행위 주체들

간의 수평적·협력적 조직[5][6], 정부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사회적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분권화되고 다중심화된 네트워크 체계[7], 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관리패턴[8], 정책결정과 서비스전달체계에서의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봉사조직 등의 네트워크[9]로 전개되고 있다. Rhodes는 거버넌스란 정부가 의미하는 바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통치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좋은 통치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as good governance)로 개념화 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좋은 통치과정 또는 통치방식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통제 중심적 통치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문과 조직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 것이 거버넌스 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에 젠더 관점을 도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젠더(gender)란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설정 및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체이다. 또한 인간이 가진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역학과정으로 양성간의 권력관계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서 여성의 종속성을 암묵적으로 내포하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젠더 거버넌스는 사회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여성의 열위를 전제하므로 권력관계를 밝히는 것부터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정책과정에 정부와 NGO가 참여하여 정책을 집행하므로 이미 젠더-거버넌스가 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0]. 거버넌스 특징인 다양한 조직 및 인력의 혼합적 활용과 더불어 통치대상에 여성불평등이 정책 의제로 채택되고 여성의 소통방식과 공간을 존중하는 통치방식을 택하며 무엇보다 여성의 생물학적 성역할과 사회적 위치를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정부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리근거를 제공하는 유용성은 있으나 이론적 체계와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젠더-거버넌스는 사회적 성(gender)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목할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젠더 친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젠더 친화적 거버넌스는 우선 젠더

관련 시민사회(여성단체)영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젠더관련 대상과 이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체 참여자들의 성평등 관련 자원을 교환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젠더 거버넌스는 ‘공공영역은 곧 국가(정부)의 일’로 되어버린 등식을 깨고 사회·정치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익 혹은 공공선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합의 형성을 위해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할 때 젠더의 관점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젠더 거버넌스에서 여성은 사회의 모든 부문이 공공업무(public affairs)를 관리하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 환경, 소방, 치안 등 과거 정부의 독점적 가치생성 영역에서 여성들도 책임을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공동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젠더 거버넌스의 시대의 정부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정부는 젠더관점을 인식시켜 여성정책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젠더관점과 여성참여를 통해 성불평등을 치유해나갈 수 있다. 또한 협력과 견제의 다른 한 축으로서 시민사회 형성의 촉진자, 촉매자, 협력자 역할을 통해 공공성 영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공유 해나갈 수 있다. 결국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 여성과 남성의 함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젠더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정부역할은 여성의 참여 확대를 뛰어넘어 법과 유인구조를 통하여 젠더관점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포함한다. 결국 젠더 거버넌스는 공공영역에서의 젠더관점과 여성참여 제고를 통하여 공공업무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2.3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우리나라 여성정책 영역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적합한 정책영역이라는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이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과의 활발한 교류속에서 성장해왔

으며, 여성운동이 국가를 협상의 대상으로 쟁점화하면서, 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에 주력해 본 것을 고려하여 소위 젠더 거버넌스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11].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1970년대 이후 여성 문제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해 활동해왔으며, 1980년대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시작으로 1990년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여성정책 전담기구인 여성부 설치,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주요 여성정책은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여성단체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여성단체의 주도적 역할은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성주류화 정책의 공론화의 시발점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 매년 전체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중심의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 사회의 초석위에 성인지 예산이 의제화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후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했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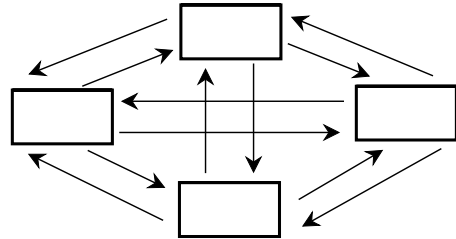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단체가 사회적 공론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성주류화 실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결기관, 전문가집단, 여성/사회단체, 언론, 압력단체, 지원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3.1 기본모형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본모형은 각 참여 주체들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참여 주체들의 성주류화 관련 질적, 양적 자원의 축적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배제한다면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높다.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은 우선 각 참여 주체간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12]. 더 나아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축적과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까지 포함한다고 할수 있다.



[Fig. 1] Network balance relation

3.2 구성요소 : 참여자

성주류화 실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즉, 여성, 소외계층, 교육기관, 직능단체, NGO,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언론, 행정부, 의회, 성별영향분석센터 등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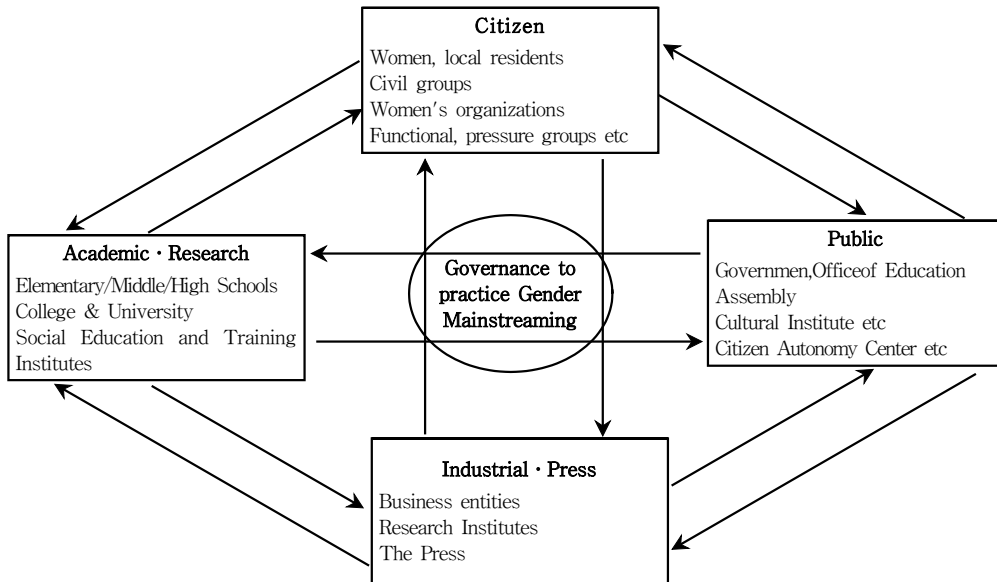
3.3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

3.3.1 민간협력 네트워크

성평등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은 참여 주체간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주류화 실행의 참여주체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형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참여주체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주체를 <표 1>로 보고 조직의 형태를 고려하여 민간, 정부, 학교·연구 부문, 산업체·언론으로 구분하였다. 민, 관, 학·연, 산·연에서도 기본모형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Table 1] Governance Participants in Practicing

Governance Participants in Practicing Gender Mainstreaming	Women
	Functional Organization
	NGO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s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
	Assembly
	Government
	The Press
	Business entities
Educational Institutions	



[Fig. 2] Network Model to Practice Gender Mainstreaming

3.3.2 네트워크형 설계 : 성평등위원회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실현은 정부나 소수의 전문가, 일부 여성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형성하고 모든 민, 관, 학교·연구, 산업체·언론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주류화 실행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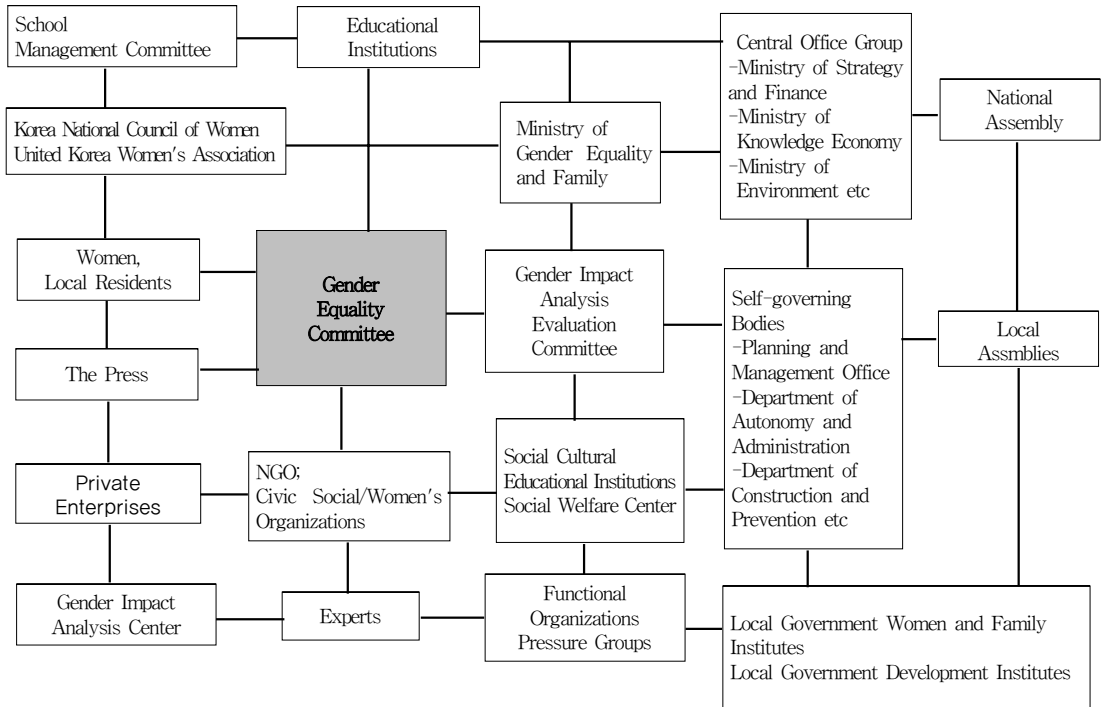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부와 시민사회/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본체제로 지역의 모든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참여주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정보 및 전략의 공유 방식, 참여자 행위자들의 역할 및 책임의 설정, 의사결정방식, 권위위임 방식 등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① 누가 거버넌스의 주체인가?
- ②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누구로 할 것인가?
- ③ 네트워크 형태를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④ 누구에게 책임을 지며 이해관계자간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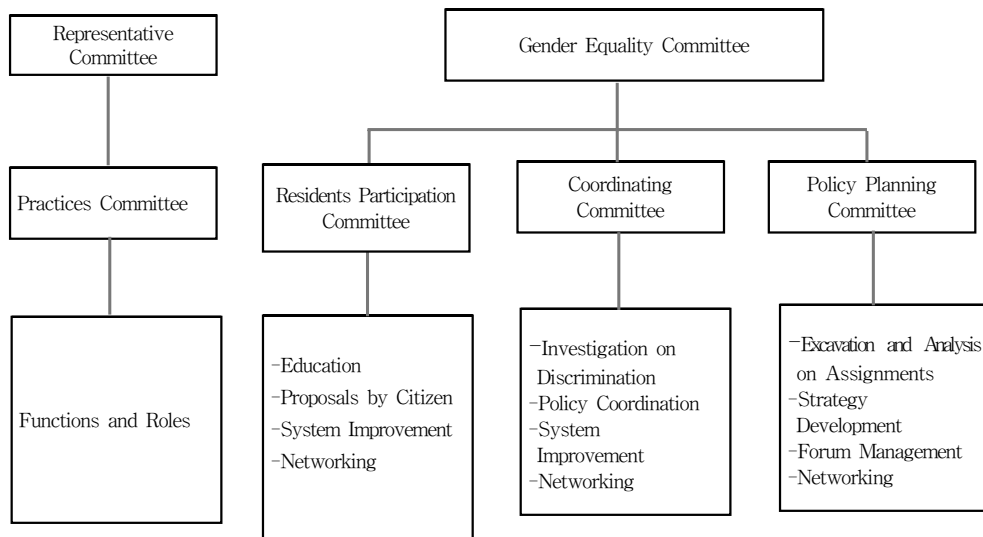
- ⑤ 어떤 참여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⑥ 어떤 분야의 정책에 참여할 것인가?
- ⑦ 어떤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 체계는 [그림 3]과 같다.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성평등 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기본안은 [그림 4]와 같다.

지방정부의 성평등위원회는 대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대표위원회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단체 등 3~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동대표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대표중 상임대표를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대표위원회의 경우도 각 영역의 대표간의 네트워크가 성립되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 승인을 기능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분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이 부여된다. 첫째,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의 지역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주류화 실행에 관련된 사항들은 성, 연령, 계층, 세대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ig. 3] Network System of Gender Equality Committee



[Fig. 4] Organization (Plan) of Gender Equality Committee

둘째, 조정위원회는 정책 및 제도, 관습이나 고정관념 등으로 성평등 실현에 대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목적

을 갖고 있다.

셋째, 정책위원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

한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성주류화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4. 결론

성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국적기구(UN, OECD, EU) 및 원조기구(UNIFEM, UNDP)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도입 당시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인한 불편함, 복잡하고 다양한 지표체계에 대한 몰이해, 성별분리통계 생산의 불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 현시점에서 모든 국민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이 진정성을 갖고 진지한 고민과 노력,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즉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소수 전문가 참여에서 다양한 조직과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본체제로 지역의 모든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형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Lee, Gab Sook · Ahn, Hee Jeong (2011), Connection of Local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Sensitive Budge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 Lee, Gab Sook(2009). A Study on the Effective Settlement Method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in Gangwondo,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3] Ahn, Hee Jeong · Lee, Gab Sook(2010). A Study on the Feedback Method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Evaluation in Gangwondo,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4] Lee, Gab Sook(2012), A Method to Construct Gender Governance for Effective Promotion of 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 in Gyeonggido, Gyeonggido Women and Family Research Institute, the 3rd Gender Sensitive Policy Forum Sourcebook, 4-5
 [5] Jessop, Bob (2000), "Governance Failure," in Gerry Stoker(e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London : Macmillan Press Ltd.
 [6] Powell, W (1991),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G. Thompson, J. Frances, R. Levacic & J. Mit-cheaa(ed), *Markets, Hierarchies and Networks, The Coordination of Social Life*, London : Sage.
 [7] Ahn, Byeong Yeong (2000), A Study on the Process to En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Collection of Treatises for Administration」.38(1)
 [8] Kim, Jeong Ryeol (2000), Future and Governance of Government : New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Network.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4(1)
 [9] Rhodes, R. A. W(1996), The Nes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ance. *Political Studies*. 44(4).
 [10] Ju, Seong Su (2002), the Role of NGO and Gender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Women's Policy, 「Women's Policy and NGO」. Hanya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Administration.
 [11] Won, Suk Yeon · Park, Jin Kyeong (2006), Search for Possibility of Gender - Governance: by Focusing on the Process to Enact the Preventive Act of Prostitution, 「Korea Women's Studies」 22(4), 85-123
 [12] Kookiman, J(1994), *Modern Governance : New Governance - Society Interactions*, London : Sage.

이 갑 숙(Lee Kab Sook)



- 1999년 2월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 2001년 5월 ~ 2006년 12월 :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선임연구위원
- 2007년 6월 ~ 2012년 5월 :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 2012년 6월 ~ 현재 :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성주류화 정책, 여성·가족정책, 여성인적자원 등

· E-mail : kabsook@hanmail.net

안 정 선(An Jung Sun)



- 2000년 8월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 2003년 2월~2005년 2월 : 대전시 여성정책자문관
- 2011년 9월 ~ 현재 : 충청남도자체평가위원장
- 1982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의료, 지역사회, 여성, 환경 정책, 거버넌스 등

· E-mail : isann@kongju.ac.kr